

서부지법 폭동 44명 구속...공수처 차 파손 10명도

경찰, 현행범 체포 90명 가운데 58명 신병 확보 형사처벌 100명 육박...“끝까지 추적” 수사 확대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하며 서울 서부지법에 침입하는 등 집단 난동을 부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22일 경찰에 무더기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홍다선·강영기 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대통령 지지자 58명에게 50명에게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로써 18·19일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90명 가운데 58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90명 중 66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3명은 반려하고 6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3명 중 법원에 난입한 2명과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명을 제외하고는 구속됐다.

윤 대통령 구속 직후인 19일 새벽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46명 중 구속된 사람은 모두 44명이다.

법원은 영장이 기각된 2명에 대해서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선 10

명도 모두 구속됐다. 이들은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후 법원에서 나온 공수처 차량 2대를 둘러싸고 타이어 바람을 빼거나 유리창을 파손시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취재진을 때린 1명과 법원 담장을 넘는 1명의 신병도 확보했다. 당초 경찰은 월남자 2명 중 3명에게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가장 먼저 담을 넘는 1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부지법 인근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7명 중 2명도 지난 20일 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됐다.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쇠 지렛대인 일명 ‘빠루’를 사용한 혐의(홍기은·후대 등)를 받는 남성 1명과 현재 담을 넘는 남성 1명,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남성 1명은 혐의의 경중을 고려해 모두 석방됐다.

같은 날 낮 마포경찰서 인근에서 미신고 집회에 참여하다 경찰관을 밀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남성 1명과 21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열린 현재 인근에서 경찰을 때린 혐의를 받는



서울구치소 경계 나선 경찰 22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찰들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 1명도 체포 후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경찰은 채증 영상을 분석하며 서부지법 난동 현장에서 체포하지 못한 이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미 2명이 자수해 불구속 입건했으며, 서부지법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20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청구한 상태다.

온라인에선 이 남성이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라는 의혹이 불거

졌는데, 교회 측은 “공식적인 직책을 맡거나 사레비를 받는 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이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추가 수사를 예고한 만큼 앞으로 구속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날 이뤄진 영장실질심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형사4단독 홍 판사와 형사9단독 강 판사가 맡았다. 법원은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 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崔대행 ‘재판관 선별임명’ 현재 심판...“권한침해” vs “국회탓”

‘여야합의’ 없으며 마은혁 임명 보류...우원식 의장 권한쟁의 청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22일 헌재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다.

현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의 공개 변론이 이날 오전 10시 열렸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고, 야당 몫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즉시 임명하겠다’며 보류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현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 등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최 대행의 행위가 권한 침해임을 확인하고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도록 현재 가명명해달라는 게 우 의장의 요구다.

국회 측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이날 변론에서 “대통령에게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사후동의권이나 임명거부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명확하다”며 “(거부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해석론”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헌법 준수 의무 등을 종합하면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며 재판관 임명의 법적 요건에 ‘여야 합의’는 없기 때문에, 최 대행이 이처럼 관행을 이유로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

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대행 측 대리인인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홍 변호사는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의해 권한이 침해됐다고 하려면 헌법 또는 법률상 피청구인(최 대행)에게 작위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헌법 규정 해석상 작위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심판 청구가 인용돼선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헌법 111조 3항은 ‘현재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하는데, 이를 대통령이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의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지 않았다고 해서 타 기관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이종석 소장

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는데 국회가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았고 12·3비상계엄 이후 급하게 절차를 추진하면서 최 대행의 부작위를 지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누구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이 인용하며 “(현재가)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으로 판단 및 권한 행사를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음을 유념해 달라”는 주장도 폈다.

최 대행 측 임명권 변호사(법무법인 해광)는 국민의힘 1명, 더불어민주당 2명의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한 것이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며, 여야가 현재소장 임명과 연계해 재판관 추천 몫을 논의하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현재는 이날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추후 선고 기일을 정해 통지하기로 했다.

검찰, 韓총리 소환...비상계엄 국무회의 파악

비공개로 피의자 조사...국회선 “계엄 절차상 잘못” 발인

‘12·3 비상계엄’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한 총리를 상대로 계엄 선포 건의 여부와 국무회의 심의 등 비상계엄 선포 당일 상황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계엄 선포를 위해선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한 총리는 계엄 선포 건의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바 없고, 당시 국무회의 심의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며 ‘12·3 비상계엄’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지난 15일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 “여러 절차상 흠결이나 실제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계엄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며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사도 비공개 출석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비공개로 피의자 조사...국회선 “계엄 절차상 잘못” 발인

비공개로 피의자 조사...국회선 “계엄 절차상 잘못” 발인

尹탄핵심판

오늘부터 본격 증인신문 돌입

김용현 등 8명 심판정에...내달 13일까지 변론 증인 늘어나거나尹 신문하면 기일 추가할 듯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증인들을 불러 신문하는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는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김 전 장관을 첫 번째 증인으로 소환한다. 구속된 구치소 수용 상태인 김 전 장관 측은 앞서 언론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는 애초 국회 측이 신청한 조지호 경찰청장도 같은 날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현재는 국회 측이 증인 신청을 유지할지 검토를 요청했다.

다음 달 4일에는 오후 2시30분부터 90분 간격으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

정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6일 오전 10시30분에는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오후 2시에는 과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오후 3시30분에는 박준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나온다.

11일 오전 10시30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현재 예정된 변론은 다음 달 13일 8차 기일이 마지막이다.

다만 채택되는 증인이 늘면 변론 기일이 추가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지속해 ‘부정선거’를 주장해 온 허병기 인하대학교 공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약 20여명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현재에 신청한 상태다.

